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중앙일보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	경제	-
2	"선관위 휴가자도 특별수고비"...올해 특별정려금만 55억	정치	-

(1)기사/뉴스요약

중앙일보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가 오늘(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 즉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중앙일보가 오늘 오후 하나은행 측에 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박장희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추진 발표 이후에도 중앙일보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어제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22매가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결제 제시됐지만, 예금 잔고 부족으로 변제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당시 입장문에서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절차를 긴밀히 협의 중인 단계"라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조기 상환을 이행하는 것은 전체 채권자 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까지 이뤄지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구조조정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신청 이후 채권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돼 정상화 가능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일보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따라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구조조정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기사/뉴스요약

“선관위 휴가자도 특별수고비”...올해 특별정려금만 55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선거기간 중 휴가를 쓴 선관위 직원들도 이른바 '수고비'로 불리는 '특별정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로부터 오늘(19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정려금 5월분을 지급받은 선관위 소속 직원 가운데 선거기간 중 휴가를 쓴 직원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정한 이번 지방선거 선거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특별정려금을 받은 선관위 직원 가운데 15명은 단순 연가를, 11명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특별정려금이 월 단위로 지급되며,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종의 수고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 직원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특별정려금으로 월 15만 원씩을,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선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5,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대선때 지급됐던 특별정려금(11억 1,400만 원)보다 5배 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사무를 엉망으로 만든 선관위가 연가·병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떡값처럼 특별정려금을 지급한 것은 책임없이 권한만 누려온 선관위의 실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인 선관위의 특별정려금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선거기간 중 휴가를 쓴 선관위 직원들도 이른바 수고비로 불리는 특별정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워크아웃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	시사논술 개념사전
2	특별정려금	각종 선거 때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종의 수고비다.	KBS

●사설스크랩_조선일보

기사: 국내 첫 SMR 확정, 반도체 이을 K-원전 미래로 키워야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로 최종 확정하며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핵심 설비를 한 용기에 넣고 공장에서 모듈을 찍어내 현장 조립하는 SMR은, 원전 산업을 건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탈바꿈시킬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특히 이번 기장에 건설될 SMR은 우리가 독자 설계해 지식재산권을 쥔 '한국형 혁신 원전(i-SMR)'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주권의 도약을 뜻한다. 우리의 제조·기자재 공급망은 미국 선두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 만큼 독보적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뉴스케일파워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고, SK와 HD현대기빌 게이트의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SMR이 가진 압도적인 강점은 송배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형 원전은 해안가에서 전력 수요처까지 초고압 송전탑을 짓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 반면 SMR은 뛰어난 안전성을 바탕으로 대도시 인근이나 대규모 공단 바로 옆에 위치하는 '분산형 전원'이 가능하다.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요동치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전력이 안정적이어서, 경기 용인이나 이천·청주의 반도체 산단 한복판에 설치한다면 전력 불안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사고 시 자연 냉각이 가능해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작고 피해 반경도 제한적이어서 친환경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탄소 중립의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보 우려로 서방 공급망에서 배제된 중국·러시아를 제외하면 AI발 전력 대란을 해결할 SMR 시장의 주역은 결국 미국과 한국이다. 미국은 설계 기술을 가졌지만 30년 건설 공백으로 기자재 공급망이 고사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뛰어난 시공·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기술·금융에 한국의 제조력을 결합하는 '한미 원전 동맹'은 수천조 원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열쇠다.

부산 기장에 들어설 국내 첫 SMR은 지역 전력 공급을 넘어 K-원전의 시공력과 안전성을 세계에 증명할 강력한 수출 플랫폼 역할도 하게될 것이다. 정부는 2035년 가동 목표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예타 면제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회 역시 이념 정쟁을 멈추고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 주권과 첨단 산업의 미래가 SMR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